



5면

미래농업 농가·마을버스 찾아 '현장 소통'

# 전주매일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음 1월 9일) 제319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북도, 도내 대학과 협력 행정 더욱 박차

## 지역혁신체계 구축한다

전북도가 올해 지역대과의 연계·협력 및 소통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대학의 경쟁력은 물론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는데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김관영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도내 대학 주체들과 인구소멸 및 지방대 충원을 부족 등 지역과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에 총체적으로 합심해 나가자고 협약한 바 있다.

도는 이후 교육협력추진단을 10월에 신설하고 대학협력팀을 조직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대학교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목표다.

#### ▲지역혁신체계 구축 적극 나서

먼저, 지역과 대학 간 연계 협력에 기반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하 RIS)'의 신규플랫폼 3개소 예산이 올해 정부예산으로 확정됨에 따라 전북의 참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전북도는 지자체, 대학, 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RS 사업을 통해 대학 학사구조 개편과 함께 핵심분야 기술개발, 연구개발 지원, 인재양성, 기업유치 및 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가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전북도는 RIS(대학중심)과 RISE(지자체 주도)간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올해에 5개 내외의 지자체를 선정해 RISE를 시범 추진할 계획으로 교육부의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면 전북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 ▲지자체-대학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

전북도는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대학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내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소재 중·고교생에게 다양한 강좌를

### 대학 경쟁력 강화 육성 거버넌스 구축 전문인력 양성 추진

운영, 학생들의 역량강화 및 도시권과의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한다.

정규수업과 연계한 교과 심화 학습, 미래인재에게 필요한 창의성 및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동아리 운영, 학력격차 완화,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을 위한 방과후학교, 학생의 적성과 희망을 고려한 진로 맞춤형 주입강좌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 현행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대학이 우수한 역량을 갖추고 외국인 유학생을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불법체류를 산식 변경 및 비자제한대학 지정 해제 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 외국인 유학생 유치 공모를 통해 10개 대학을 선정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을 지원하며, 외국인 유학생을 도내 대학으로 유인하기 위한 기숙사 지원도 시행한다. 전북도는 2019년 총칭사에 전라북도 유학생터 현관을 내걸었으나 곧바로 터진 코로나19로 인해 교류가 막혔던 것을 올해 다시 재개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전북 지역대학 육성 거버넌스

구축·운영  
교육전담부서인 교육협력추진단 중심으로 전라북도 대학 상생발전협의회(이하,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지자체-대학 간 상생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상생발전협의회는 도지사, 대학 총장, 교육감, 도의회, 유관기관, 기업의 장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육성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장협의회, 교육소통협력국장급과 도내 대학 기획처장이 참여해 지역 및 대학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기획처장회의, 대학관련 총괄협력 및 정기적인 소통 및 각 세부 사업별 실무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월회) 등 3단 체제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양성

도대학기업 간 연계를 통해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양성에도 적극 추진한다.

자격증 취득, 현장실습, 기업 우선 채용 약정 등을 통해 도내 대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대학 산학관 커플링사업은 올해 28개 과정 800명 내외의 규모로 운영한다. '지역특성화산업 6개 분야(에너지신산업, 미래수송기계, 스마트농생명, 첨단융복합소재, 라이프케어, 정보통신융합)에 대해서는 15개 과정 280여 명에게 등록금 및 취업지원금을 지원해 지역 내 취업 및 정착을 유도한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지자체 교육협력추진단 구성을 통해 도-교육청-대학 간 교육협력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더욱 강화된 협력과 소통으로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V' 자 형태 날갯짓 하며 날아 오르는 검독수리



지난 27일 순창군 채계산 인근의 들녘, 날이 추워지자 부족한 먹이를 찾아 민가 주변을 맴도는 '검독수리'가 포착됐다. 대형 맹금류인 검독수리는 키 80cm 정도에 비행시 날개를 편 모습은 2m에 가까운 크기를 보였다. 희귀 겨울철새인 검독수리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 이면서 '천연기념물 243-2호'로 지정된 보호종이다.

### 도, 전 도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 보험금 최대 1000만원 지급

전북도는 각종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지원하고자 전도민 안전보험을 가입해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은 도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 기본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의사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로 3백만 원에서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원한다.

기본 보장항목 이외에 각 시·군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농기계 사고, 성폭력 피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강도상해, 야생동물 피해 등을 추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보장항목 및 청구 방법은 주민등록지 시·군 재난부서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허전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전북도, 중대본 발표에... 의리기관 등은 '의무' 유지  
"코로나19 등 끝나지 않아 방역수칙에 더 신경써달라"

전북도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이 시행된 2022년 8월 19일 이후 약 2년 5개월여 만이다.

이 같은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7차 유행을 저지했다고 판단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전북도 역시 중앙 방역당국의 정책에 맞춰 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마스크 착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계속된다.


도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지만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에 감염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60세 이상의 동절기 추가접종 등도 중증화·사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노창환 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오랜 시간 불편을 감수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에 협조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뀐 것일 뿐, 아직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는 끝나지 않았으므로 개인 방역수칙에 더욱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주소지 외 지자체(기초·광역)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에  
사용하는 제도 (기부 한도 : 연간 최대 500만 원)

**[기부자 혜택]**

- 세액공제 :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
- 답례품 : 기부금의 30% 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기부금 사용처]**

- 주민복지 증진사업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문의 : (063)320-2606